



# 주간 통일정세

2013-35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동향

#### 가. 정치

- **김정은, 黨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주제…“중요한 결론”(8/2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통신은 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의 요구와 인민군대의 현 실태로부터 출발해 혁명무력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고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이 토의 결정됐으며 조직 문제도 논의됐다고 보도함.
  
- **北, 군수공장 밀집 자강도 당 책임비서에 김춘섭 임명(8/27, 연합뉴스;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27일 1면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선군절’(8월 25일)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 대한 당·정·군 고위간부들의 반응을 실으면서 김춘섭을 ‘자강도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소개했다며 자강도의 당 책임비서가 류영섭에서 최근 김춘섭으로 교체되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北, 김정은 ‘선군절 담화’ 관철 맹세 잇달아(8/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1면 톱기사로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경옥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안정수 경공업상, 김춘섭 자강도당 책임비서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선군절 담화’에 신속히 반응하며 내놓은 ‘과업 관철’을 맹세를 인용 보도함.
  
- **北, ‘선군절’을 국가 명절로 제정(8/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령’을 통해 “선군절인 8월 25일을 국가적 명절로 한다”며 “해마다 이날을 국가적 휴식일로 한다”고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北 김정은, ‘청년절’ 기념 축구경기 관람(8/29, 조선중앙통신)**
  - 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청년절’인 28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인민군 ‘4·25팀’과 노동적위군 ‘선봉팀’ 간의 ‘햇불컵’ 1급 남자축구 결승전 경기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北 9월 첫날부터 ‘정권 수립’ 65주년 경축 모드(9/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면에 ‘공화국 창건 65돌을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뜻깊게 맞이하자’는 제목으로 강원도 마식령스키장, 평안북도 간척지 등의 경제 현장에서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고 주장함.
- 특히 머리기사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한 각지 경공업 공장을 소개하며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려 뜻깊은 9월의 축전장을 빛낼 불타는 일념”이라고 언급, 주민이 쉽게 체감하는 경공업 분야 증산에 신경 쓰고 있음을 드러냄.

■ **김정은동향**

- 8/26, 김정은 黨 제1비서, ‘黨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주재(8.26, 중통·중방)
  - 黨 중앙군사위 위원들, 軍 당위원회 집행위원들, 군종,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 참가
  - 김정은 黨 제1비서는 회의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며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다그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하였다’고 보도
- 8/26,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무력부 ‘선군절’ 경축연회 참가(8.26, 중통·중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인 차수, 연설), 당중앙위, 당중앙군사위, 국방위, 軍 지위성원들, 군단 지휘성원들 참가
- 8/28, 김정은 黨 제1비서, 햇불상 1급남자축구 결승경기 관람(8.29, 중통·중방)
  -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리영길, 장정남,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강석주, 김양건, 김평해, 문경덕, 로두철, 조연준과 국가체육지도위원들, 체육종목별 후원단체 책임일꾼들 등 함께 관람
- 8/28, 김정은 黨 제1비서, 故 ‘김병훈’(문예총중앙위 전 위원장) 영전에 화환 전달(8.29, 중통)
- 8/28, 김정은 黨 제1비서, 조국해방전쟁승리(8.15) 60돌 즈음 축전을 보내어 온 여러 나라 국가 수반들에게 답전(8.28, 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선군절' 53돌 경축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위대한 선군영장 만만세', 8.26 김영남 참가下 인민극장에서 진행(8.26, 중통·중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8.26), '선군절(8.25)을 국가적 명절, 해마다 휴식일, 軍 부대와 구분대들에서 이날에 최고사령관기를 띄울 것이며 국가기관·기업소·단체들과 가정들은 공화국 기를 띄울 것'을 결정(8.28, 중통)
- 黨·국가 책임일꾼들, 각지 청년학생들과 함께 청년절 경축(8.28, 중통)
  - 김영남, 박봉주, 김기남, 양형섭, 강석주, 김평해, 로두철 등
-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메타놀생산공정 준공식, 8.29 박봉주(내각총리)·곽범기(黨중앙委 비서)·태종수(함경남도 黨위원회 책임비서)·이무영(내각부총리) 참가下 진행(8.29, 중통·중방)  
박의춘(외무상), 8.31 브루나이 외무 및 무역상과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8.31, 중통·중방)
- 브루나이 외무 및 무역상, 8.31 금수산태양궁전 김일성父子 동상 참배(8.31, 중통·중방)

나. 군사

● 北 리영길 대장 승진...김정은 시대 약진 주목(8/29,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시대의 핵심인물로 주목받는 리영길 인민군 상장(우리의 중장)이 최근 대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9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인용·보도함.
-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9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간부들을 대동하고 전날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햇불컵' 1급 남자축구 결승 경기를 관람한 소식을 전하며 곁들인 사진에 리영길은 대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음.

● 북한 장정남 인민무력부장도 대장 승진(8/30, 연합뉴스)

- 북한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이 상장(우리의 중장)에서 최근 대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함.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28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햇불컵' 1급 남자축구 결승전을 관람하는 모습을 담은 조선중앙통신 사진에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은 별 4개의 대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음.





- 북한 여자 유도외의 설경(23)이 30일(현지시간) 2013 리우데자네이루 세계 유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설경은 이날 여자 78kg급 결승전에서 네덜란드 선수를 꺾고 1위를 차지함.
- **北 최초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건설(8/31, 연합뉴스; 조선신보)**
    -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문턱과 계단이 없는 장애인 전용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31일 연합뉴스가 전함.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평양시 동대원구역에서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장애인 운동선수를 위한 ‘동대원장애자운동관’이 건설 중이라고 보도함.
  - **北, 재생에너지법 제정…“관련산업 활성화·환경보호”(9/1, 연합뉴스; 조선신보)**
    - 전력난 등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을 겪는 북한이 최근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일 전함.
    - 연합뉴스가 1일 입수한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8월 23~24일자는 2회에 걸쳐 ‘법규해설’ 코너에서 ‘재생에너지(에너지)법’을 상세히 소개함.
    - 재생에너지법이 북한 매체에서 소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민주조선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재생에너지법을 채택·발포했다”고 밝힘.
  - **北 김정은 옆자리 차지한 ‘백발의 축구 해설자’(9/1,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조국과 인민이 사랑하는 애국가 축구박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제1위원장이 지난달 14일 룡악산팀과 보통강팀 간 남자축구 경기를 관람할 때 북한의 축구 해설자 리동규가 주석단에 앉아있었다고 소개함.
    - 신문은 당시 신문과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본 주민이 김 제1위원장 옆자리의 ‘머리 흰 사람’에 대해 궁금해했다며 “그가 바로 인민이 사랑하는 축구경기 해설원인 체육과학원 체육과학연구소 연구사 리동규 동무”라고 밝힘.

## 2. 대외관계

### 가. 일반

- **반기문 “적절기회 방북검토…DMZ평화공원 적극돕겠다”(8/26, 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6일 “적절한 기회를 봐서 북한 당국,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해 가면서 방북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 스가 26일 보도함.
- 반 총장은 “현재 남북관계가 서서히 진전되는 과정에 있다”면서 “우선은 관계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추후에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이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 **마우러 국제적십자총재 “北, 이산가족 상봉 의지있어”(8/26, 연합뉴스)**
    - 지난 20~23일 북한을 방문했던 피터 마우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는 26일 “북한 당국도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의지가 확실히 있더라”라고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함.
  - **북한, 올봄 시리아에 무기수출하려다 터키서 압수돼(8/27, 산케이신문)**
    - 산케이(産經)신문은 27일 미군 소식통 등을 인용, 북한이 가스마스크와 대량의 총기, 탄약을 리비아 선적 화물선으로 시리아에 수출했다는 정보를 미군이 입수, 미군의 통보를 받은 터키 치안당국이 지난 4월 4~5일 이스탄불 인근 항구에서 화물선을 수색해 이들 무기를 압수했다고 보도함.
    - 신문은 압수된 화물에 라이플과 단총 1천400정, 저격 라이플용으로 보이는 탄환 등 3만발, 중기관총용 탄환클립 2천600개 외에 화학방호용으로 보이는 가스마스크 등이 있었다고 밝힘.
  - **다루스만 “유엔 조사위는 北인권 강경접근 출발점”(8/27, 연합뉴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27일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제3회 ‘사이오 인권포럼’ 기조연설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다 강경한 접근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관련 유엔 결의들에 대해 만장일치의 지지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의 인권보장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는 COI의 조사와 제안을 토대로 북한 정부가 인권 문제에서 충실히 협력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北 “북한인권 언급은 대화 분위기 깨려는 것”(8/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망동’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 등을 비난하며 “북한인권 문제를 다시 들고나와 소동을 벌이는 것은 대화 분위기가 비위에 거슬리거나 그것을 깨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 통신은 “서로 다른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 등 적대 행위를 계속한다면 북남관계는 물론 한반도정세는 또다시 격화일로로 걷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北수용소 6곳중 22호·18호 폐쇄·해체(8/27, 연합뉴스)**

  -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6곳 중 2곳이 폐쇄 또는 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 비정부기구(NGO)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27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평안남도 개천(14호) 및 북창(18호), 함경남도 요덕(15호), 함경북도 화성(16호) 및 회령(22호)과 청진(25호) 등 외부에 알려진 6곳의 수용소 중 이른바 ‘22호 관리소’를 폐쇄하고 ‘18호 관리소’는 사실상 해체한 것으로 드러남.
  
- **中회사, 北나선시와 자동차생산지 건설 의향합의서(8/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조선나선삼대성합영회사 이사장 성학식의 말을 빌려 제3차 나선국제상품전시회(8월 19~23일) 기간에 중국제1자동차집단공사가 나선시인민위원회와 ‘자동차 생산기지 건설에 관한 의향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함.
  
- **북한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몽골 방문(8/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보안부(경찰청에 해당) 대표단이 27일 몽골을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유엔 北인권조사위 “北, 인권위 방문조사 허용해야”(8/27, 연합뉴스)**

  - 내한중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믿을만한 국제기구가 북한에 가서 인권 관련 쟁점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을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북한 당국은 COI가 북한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커비 위원장은 COI 청문회와 관련, “북한 당국이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체실험한다”는 등 일부 증거가 부족한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치범수용소·교도소에서의 인권침해, 공개처형, 연좌제, 납북자·국군포로, 여성에 대한 강제낙태·인신매매 등과 관련한 믿을만한 증거들을 수집했다고 밝힘.
  
- **김정은 ‘동북아서 위험한 일 없을 것’(8/27, 마이니치 신문)**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달 방북한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가부주석에게 ‘앞으로 동북아에서 위험한 일은 일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핵과 미사일 관련 도발을 자제할 뜻을 시사했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27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소수 인사만 자리한 가운데 진행된 비공식 회동에서 리 부주석은 ‘한반도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말 것’을 요구하고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강조하는 중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에 김 제1위원장은 ‘중국의 입장은 이치에 맞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앞으로 크게 궤도를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청천강호 억류’ 파나마 “북한에 입국비자 발급”(8/28, 연합뉴스)
  - 페르난도 누네즈 파나마 외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북한 당국자들이 파나마 정부가 발급한 입국 비자를 28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북한 당국자들이 파나마에 구금 중인 북한 선박 청천강호 선원들을 면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함.
- 청천강호 전투기부품, 북한에서 쓰려던 것(8/28, 연합뉴스)
  -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선박 청천강호에 실린 전투기 부품은 쿠바의 주장처럼 정비 후 반송용이 아니고 북한에서 사용하려던 물품일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이번 청천강호의 무기류 수송은 명백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함.
- 오스트리아 스키장비 업체도 北과 거래안해(8/28,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8일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스키장비 업체 ‘피셔 스포츠’가 “북한으로부터 스키장비 주문을 받지도, 물건을 판매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을 것”라고 밝혔다고 보도함.
  - 프란츠 피팅거 대표는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 건설사업 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일본의 가토 켄(加藤健) 아시아국제인권 대표의 이메일을 받고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짐.
- 킹 美특사 30일 전격 방북…케네스 배 석방될 듯(8/28, 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에 억류 중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의 석방을 위해 오는 30일 북한을 전격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함.
  - 국무부는 마리 하프 부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킹 특사가 30일 북한으로 건너가 31일 귀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킹 특사는 북한 당국에 인도적 차원에서 케네스 배를 용서하고 특별 사면을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함.
- 파나마 “北 선박서 발견된 무기, 유엔 제재 위반”(8/29, 연합뉴스)
  - 파나마 당국은 28일(현지시간)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가 신고하지 않은 채 쿠바 무기를 운반한 것이 대북 무기 수송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北 인민보안부장, 몽골 대통령 면담(8/29, 몬짜메통신; 조선중앙통신)
  - 몽골을 방문 중인 북한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이 28일 차히야 엘베크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면담했다고 몽골 몬짜메통신이 29일 보도함.
  - 엘베크도르지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방북 초청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



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양국 간 협력 방안들을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북한 인민보안부와 몽골 법무부의 협력관계가 발전한 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경제와 무역 부문에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베 “北 납치문제 이번 정권서 완전히 해결”(8/30, 교도통신)**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실태 조사차 일본을 찾은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과 30일 관저에서 만나 “납치문제를 이번 정권에서 완전히 해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통신은 아베 총리가 이 자리에서 납치피해자 전원 귀국, 납치범 송환을 원하는 일본 정부의 생각을 설명하고 커비 위원장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고 보도함.
- **北 방문 러시아 연해주 주민 급증(8/31, 자유아시아방송(RFA); 프리마미디아통신)**
  - 북한과 러시아 연해주의 경제협력이 확대되면서 북한을 찾는 연해주 주민도 급증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함.
  - RFA는 러시아 프리마미디아통신을 인용해 올해 상반기 북한을 방문한 연해주 주민은 1천48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87명보다 16배나 늘었다고 전함.
- **北단체 “日, 간토대학살 등 과거사 사죄·배상해야”(8/3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 유가족협회는 간토(關東) 대학살 90주년을 하루 앞둔 31일 일본 정부에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유가족협회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간토 대학살 이후 90년이 지났지만 “일본 당국은 오늘까지도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고사하고 진상조차 똑똑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난함.
- **北외무성 “킹 특사 초청 철회는美폭격기 출격 때문”(8/3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1일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방북 초청을 철회한 것은 미국이 한미 합동군사연습 기간 전략폭격기를 출격시켰기 때문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장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최근 한미군사연습 기간 “전례없이 연속적으로 B-52H 전략폭격기를 조선반도 상공에 들이밀어 핵폭격 훈련을 벌이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미국은 모처럼 마련됐던 인도주의 대화 분위기를 한순간에 망쳐놓았다”고 비난함.



#### ■ 기타 (대외 일반)

- [중통 논평]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訪韓 활동(8.18-27, 탈북자 증언 청취·공청회 등) 및 국무총리의 ‘북인권법’ 제정 추진 발언에 ‘대화분위기가 비위에 거슬리거나 그를 깨기 위해서’라고 왜곡 再 비난(8.27, 중통)
- 일본 총무상 등 정객들의 지난 8.15 야스쿠니 신사 집단참배는 “조선과 아시아 인민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라고 규탄 및 ‘일본의 군국화, 재침속심’ 경중(8.27, 중통·노동신문)

#### 나. 6자회담(북핵)

-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 우다웨이 방북(8/26,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6일 북한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이징의 한 외교 전문가는 “우다웨이 대표의 이번 평양 방문은 리위안차오 부주석 방북의 후속조치적 측면이 있다”면서 “북한에 비핵화 및 대화를 촉구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함.
- **北 김계관, 中 우다웨이 면담(8/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북한의 핵 협상을 총괄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에서 담회했다고 보도함.
- **아세안 국방장관회의 18개 참가국 ‘北비핵화’ 촉구(8/29, 연합뉴스)**
  - 제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가한 18개국 국방장관들은 29일 북한에 대해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의장성명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촉구한다”는 문구가 반영됐다고 국방부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이 전함.
- **中 우다웨이, 방북 일정 마치고 귀국(8/30, 조선중앙통신)**
  - 지난 26일 북한을 방문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일행이 30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 우 대표 일행은 28일에는 전쟁기념관을 참관하고 5·1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했으며 29일에는 김일성·김정일 사진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는 등 평양시내를 유람함.
- **日, 대북 금융제재 추가...9개 기관, 개인 2명(8/30, 산케이(産經)신문)**



- 일본 정부는 30일 각의를 열고 대북 금융 제재 대상으로 북한 평양의 대동신용은행, 조선대성은행 등 9개 기관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산케이(産經)신문이 전함.
- 신문에 따르면 9개 기관외에 북한 원자력개발부문 간부 등 개인 2명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됨.

### 3. 대남동향

#### 가. 정치·군사

- 北 “상호 양보로 남북 대화·협력 추진해야”(8/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화해와 평화, 공동 번영을 추동하는 정당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과 남이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발휘된 상호 이해, 양보 정신으로 함께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대화와 협력이 적극 추진돼 온 겨레에게 더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등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이달 18일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 담긴 제안들은 “그 어떤 사십도 없으며 북남관계를 위기에서 구원하고 하루빨리 나라의 평화와 통일, 민족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려는 진정이 깔려 있다”고 강조함.
- 北국방위 “韓美, 대화·평화 환경에 유익한 결단해야”(8/29, 조선중앙통신)
  -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회에서 을지프리트검기디언(UFG)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대북전단 살포 등을 ‘전쟁소동’으로 비난하고 “지금이야말로 대화상대를 겨냥한 시대착오적인 행동이 아니라 대화분위기와 평화적 환경 마련에 유익한 정책적 결단만 허용될 때”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우리는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해 지금 이 시각도 최대한의 인내성을 발휘하면서 여러 가지 건설적이고 과감한 평화적 조치들을 구상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제는 냉전시대 유물인 적대관념과 동족대결정책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고 강조함.
- 北, ‘내란음모 수사 사건’ 논평없이 보도(8/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남한의 언론 보도를 인용해 국정원과 검찰이 “야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또 한차례의 대대적인 폭압에 나섰다”면서 “통합진보당 의원과 관계자들, 경기동부연합 성원들에게 내란음모죄를 들씌워 그들의 집과 사무실들에 대한 수색소동에 열을 올렸다”고 전함.
  - 통신은 “괴뢰패당은 그들이 지난 5월 서울에서 모임을 가지고



체제전복을 모의한 사실을 포착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지하혁명 조직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추적수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고 덧붙임.

● **北노동신문 “남북 대화는 ‘홍정’이 아니다”(8/31, 노동신문)**

- 북한은 31일 남북간 대화에서 ‘홍정’을 지양해야 하며 한반도 관련국들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동조하지 말아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주장함.
- 신문은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북남 사이의 대화는 민족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의 마당이지 홍정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지적함.
- 그러면서 “이기적인 타산과 같은 판마음을 품고 동족과의 통일대화에 나설 때는 지나갔으며 진정으로 분열로 고통 겪는 겨레의 아픔을 풀어 주려는 선의와 인간애만이 회담장에 차넘쳐야 한다”고 말함.

● **조선신보 “北, 한반도 평화 ‘통 큰 해법’ 구상”(8/31, 조선신보)**

- 북한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통 큰 해법’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북한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31일 보도함.
- 신보는 ‘조선이 구상하는 과감한 평화조치’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29일 발표된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가 “건설적이며 과감한 평화적 조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 “그동안 평화 대화의 시작에 이르지 못한 전제조건을 달면서 대결 노선에 집요하게 매달려온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더이상 시비할 수 없는 대범한 행동 계획, 통이 큰 문제타결안이 구상됐을 수 있다”고 밝힘.

나. 경제·사회·문화

● **北, 금강산 회담 연기제안에 ‘유감’ 표명…재고 요구(8/28, 연합뉴스)**

- 북한은 28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당초 제안일보다 1주일 늦은 오는 ‘10월 2일’ 개최하자는 우리측 수정 제안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재고를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함.
-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10월 2일 수정제안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한 남북간의 조치가 이뤄지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심사숙고한 결과”라면서 “북측이 호응해 올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전달함.

● **北 “개성공단 공동위 1차 회의 내달 2일 개최”(8/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남북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 문안에 최종 합의한 사실을 논평 없이 간략히 전하며 “개성공업지



- 구 북남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는 9월 2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힘.
- 통신은 남북이 공동위 산하에 “상설사무처와 필요한 분과들을 내오고 개성공업지구 운영 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임.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확정, 내달 2일 첫 회의(8/29,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와 관련 “쌍방이 합의서를 교환하는 절차만 남았다”면서 “문건 내용은 오늘 오전 최종 확정됐으며, 다음달 2일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확정됐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공동위는 개성공단과 관련된 남북간 합의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총괄하고 산하 분과위 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공단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양측 당국간 해결해야 할 현안 등을 협의·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됨.
    - 남북은 공동위를 위원장 각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장급이 맡기로 했고 공동위 산하에 ▲ 출입·체류 ▲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 통행·통신·통관 ▲ 국제경쟁력 등 총 4개의 분과위를 두기로 했으며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양측 합의하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南 250명-北 200명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 명단 교환(8/29, 연합뉴스)**
    - 남북이 29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생사확인 의뢰 명단을 교환하고 상봉 후보자 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대한적십자사(한적)는 이날 이산가족 후보자 250명을 북측에 전달하고 북한 조선적십자회도 이날 200명의 이산가족 후보자 명단을 우리 측에 전달함.
    - 남북 양측은 다음 달 13일 이산가족 후보의 생사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교환하고 사흘 뒤인 16일 이산가족 상봉 최종명단을 100명씩 주고받을 예정임.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위원장에 김기웅·박철수(8/30, 연합뉴스)**
    -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협의할 남북공동위원회(공동위) 우리측 위원장은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북측 위원장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맡게 됐다고 30일 연합뉴스가 전함.
    - 남북은 30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다음 달 2일 열리는 공동위 제1차 회의에 참석할 양측 위원 5명의 명단을 교환했다고 통일부가 밝힘.
  - **남북 여성단체 ‘위안부 공동토론회’ 11월 개최기로(8/30, 연합뉴스)**
    - 남북 여성단체가 오는 11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토론회



를 열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전함.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오는 11월 초 을사늑약 날조 108년을 계기로 남과 북, 해외 여성단체와 함께 참여하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해외여성토론회’를 (추후) 합의되는 장소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힘.

● 남북, 내일 개성공단 공동위 1차회의 개최(종합)(9/1, 연합뉴스)

- 남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2일 오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연다고 1일 연합뉴스가 전함.

■ 기타 (대남)

- 南北, 개성공단 공동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8.29, 중통·중방)
- [北 국방총 정책국 대변인 담화(8.29)]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연습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전쟁소동”으로 비난하고 “대화상대를 겨냥한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니라 대화분위기와 평화적 환경 마련에 유익한 정책적 결단만이 허용될 때”라고 주장(8.29, 중통·중방·평방)

●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北, 조만간 한·미·일 겨냥 생화학무기 공격 능력 보유”(8/27, 연합뉴스)

- 브래드 로버츠 전 미국 국방부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스탬슨센터 세미나에서 “북한이 조만간 한·미·일을 겨냥해 재래식 무기와 핵탄두 공격은 물론 아마도 생화학 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조만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그는 또 “북한은 이미 현존하는 핵무기 능력을 갖춘 국가로 북한의 노골적인 위협 가능성을 결코 경시할 수 없다”며 “특히 지난 10년간 북한은 핵능력에서 진전을 거듭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 ● 美 러셀·데이비스, 내주부터 한·중·일 순방 나서(8/27, 연합뉴스)

-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다음 주부터 잇따라 한·중·일 순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소식통은 “남북관계에 긴장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중국도 대화 재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는 시점이어서 러셀 차관보와 데이비스 대표의 이번 순방이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미국이 대화재개 가능성을 놓고 관련국과 긴밀한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지난달 취임한 러셀 차관보는 한·미·일 3국의 동맹체제를 재점검하고 중국과는 북한문제를 중심으로 공조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데이비스 대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등을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현황을 평가하고 북미대화과 6자회담 재개 문제를 정밀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 ● 한국 “6자회담 재개, 북한 비핵화 진정성 중요”(8/27, 미국의소리)

-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우다웨이 대표의 방북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 한 부대변인은 “6자회담이 재개가 되려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





을 거듭 촉구했음.

● IAEA “북한 영변 핵시설서 건설작업 감지”(8/29, 연합뉴스)

- 북한이 가동을 중지했다가 지난 4월 재가동을 선언한 영변 핵시설에서 건설 작업을 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8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밝혔음.
- IAEA는 “도랑 파기 작업은 원자로 냉각 시스템의 구조변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맞으면 2008년 폭발한 원자로 냉각탑을 재건축하지 않고도 원자로를 다시 가동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북한 핵 프로그램이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문제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 한편, 북한은 지난 4월 핵무기에 쓰이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5 MW급 흑연감속로를 포함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하며 6자회담 합의 파기와 핵무기 생산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음.

나. 미·북 관계

●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미국 시민의 석방을 위해 방북(8/27, CNN)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금주 북한에 억류 중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의 석방을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며, 미국 시민권자인 배씨는 지난 9월부터 이곳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미 국무부와 백악관이 화요일 전했다.
- 올해 4월 북한 최고재판소(North Korea's supreme court)는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를 이유로 배씨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으며, 배씨는 심각한 건강악화로 최근 병원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의 여동생이 밝혔음.
- 한편, 미국은 북한 당국에 지속적으로 배씨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음.

● 북한의 ‘화해 제스처’ 북미관계에 도움 될까?(8/29, 월스트리트저널)

- 킹 특사를 만나겠다는 결정은, 올해 2월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도발 위협 수위를 높여온 북한이 처음으로 미국에 공식적으로 내민 화해의 손길임.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보인 ‘화해 카드’가 북한의 핵개발을 지지하려는 미국 측의 노력에 어떤 의미로 작용할지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음.
- 워싱턴DC 군축비확산센터의 김두연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케네스 배를 석방하는 등 ‘선의의 제스처’를 보이면 북미 핵논의에 도움이 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미국의 협상 전제조건인 ‘핵프로그램 중단’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음.
- 킹 특사가 2011년 에디 전의 송환을 위해 방북한 경험이 있음. 그러나 에디 전의 선례는 북미관계 진전에 유용한 이정표로 작용하지 못했음.



- **北, 킹 특사 초청 전격 철회...향후 재추진 불투명(8/31, 연합뉴스)**
  -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30일 성명에서 “북한이 미국시민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의 석방을 추진하기 위해 30~31일 북한을 방문하기로 했던 킹 특사에 대한 초청을 철회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초청 철회에 “놀랍고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 킹 특사는 이날 방북해 지난해 11월부터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석방 문제를 놓고 북한 당국과 협의한 뒤 배씨와 함께 31일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관측됐으나 북한 방문이 무산됨에 따라 킹 특사는 일본 도쿄를 출발해 31일 오후 워싱턴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 한편, 하프 부대변인은 또 이번 초청 철회 결정과 관련해 북한측에 해명을 요구했으며, 킹 특사의 방북이 예정대로 혹은 이후에라도 방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 다. 중·북 관계

-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 우다웨이 방북(종합)(8/26, 연합뉴스)**
  -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6일 북한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우다웨이 대표는 평양에서 북한 핵 협상을 총괄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을 만나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에서 유화적 태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우다웨이 대표가 방북, 대화방안을 논의함으로써 6자회담 등의 다자대화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김정은 ‘동북아에서 위험한 일 없을 것’”(8/27,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달 방북한 리위안차오 중국 국가부주석에게 ‘앞으로 동북아에서 위험한 일은 일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핵과 미사일 관련 도발을 자제할 뜻을 시사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7일 보도했음.
  - 소수 인사만 자리한 가운데 진행된 이 비공식 회동에서 리 부주석은 ‘한반도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말 것’을 요구하고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강조하는 중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전달했음.
  - 이에 김 제1위원장은 ‘중국의 입장은 이치에 맞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앞으로 크게 궤도를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그러나 김 제1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언급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마이니치는 소개했음.

#### 라. 일·북 관계



- **日연구자들, 평양서 일본인 유골 매장지 조사(8/29, 연합뉴스)**
  - 2차대전 종전 전후에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들의 유골이 묻혀있는 매장지에 대한 현지 조사가 28일 평양 교외에서 실시됐음.
  - 29일 교도통신 평양발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교토대 미즈노 나오키 교수 등 4명은 이날 조희승 북한 사회과학원연구소장의 안내로 일본인 2천 400명 이상이 합동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평양 교외의 ‘용산묘지’를 방문, 매장 장소 등을 확인했음.
  - 한편, 북한에는 종전 전후의 혼란 상황에서 사망한 일본인 매장지가 약 70곳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 매장이 확인된 곳은 5~6 곳 정도임.
  
- **아베 “北 납치문제 이번 정권서 완전히 해결”(8/30,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실태 조사차 일본을 찾은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과 30일 관저에서 만나 “납치문제를 이번 정권에서 완전히 해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이 자리에서 납치피해자 전원 귀국, 납치범 송환을 원하는 일본 정부의 생각을 설명하고 커비 위원장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고 보도했음.
  - 커비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협력하는 것이 납치 문제의 수수께끼를 풀고 인권을 지키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가 건설적으로 작성되도록 협력을 부탁한다”고 답했음.

마. 기타

- **“北, 부산거쳐 시리아에 화학무기물자 보내려다 적발”(8/24, 연합뉴스)**
  - 지난 2009년 10월 우리 정부당국이 부산신항에 들어온 컨테이너 운반선에서 적발한 다량의 방호복이 북한이 시리아로 수출하려한 화학무기 관련 물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음.
  - 이는 화학무기 사용 의혹이 제기되는 시리아와 북한의 ‘화학무기 커비션’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런던에 주재한 시리아 인권단체(SOHR)는 이번에 화학무기 공격장소로 알려진 알레포 근처에서 북한 장교들이 시리아 군대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고 레버논 언론인 ‘더 테일리 스타’가 지난달 26 일자로 보도했음.
  
- **‘청천강호 일부 무기, 북한서 쓰려던 것’(8/29, 미국의소리)**
  - 스웨덴의 민간단체인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는 27일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매체인 ‘38노스’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청천강 호에서 발견된 쿠버산 무기들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주장했음.



- 이 연구소는 또 무기의 포장과 선적 상태를 보면 쿠비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파나마에 억류된 북한 선박 '칭찬강 호'에 실린 전투기 등 일부 무기는 북한이 직접 사용하려던 물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 ● 아세안 국방장관회의의 18개 참가국 '北비핵화' 촉구(8/29, 연합뉴스)

- 제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가한 18개국 국방장관들은 29일 북한에 대해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촉구했음.
- 이들 장관은 이날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와의 엠파이어호텔에서 열린 ADMM-Plus 본회의에서 이틀간 진행한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음.
- 의장성명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촉구한다"는 문구가 반영됐다고 국방부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이 전했다. 한편, 회의 공동선언문에 북한과 관련한 문구가 들어가지는 않았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정치·군사적 판단' 얽힌 전작권 문제, 결론 지연(8/28, 연합뉴스)

-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는 양국의 정치·군사적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국방비 증액 등 민감한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양국간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국방부는 애초 10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목표로 추진하던 전작권 재연기 논의와 관련,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기술적인 문제는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 안보상황과 앞으로 한반도 안보상황 재평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수준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적인 능력 등임.
- 한미 양국은 일단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는 '핵무장화 가시권'이라는 공동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력과 전작권을 행사 능력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 랭글, 차대통령에 美의회 '한반도결의안' 전달(8/29, 연합뉴스)

- 찰스 랭글 미국 하원의원은 지난 26일 청와대를 찾아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최근 미국 의회 상원을 통과한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결의안(H.CON.RES.41)'의 영어 원문을 전달했음.
-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결의안은 지난 1일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



과된데 이어 다음날인 2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처리된바 있음.

- 결의안에는 미국 의회가 한국전쟁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반도 평화와 번영 증진을 위한 미국의 대(對)한국 동맹공약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아울러 북한에 국제법 준수와 핵무기 폐기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나. 한·중 관계

##### ● “중국방장관, 한반도 비핵화·대북제재 준수 동의”(8/29, 연합뉴스)

-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브루나이에서 열린 제2차 아세안화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 직후 별도로 진행된 양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준수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음.
- 김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준수에 대해 중국 측도 동의했다”면서 “한중관계는 잘 닦여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틀 속에서 잘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국방장관 간 핫라인 조속 설치, 중국 국방장관 내년 방한, 공군 에어쇼와 방산전시회 상호참가, 군인사 교육교류 확대 등 4가지 사항에 합의했음.

#### 다. 한·일 관계

##### ● 아베 일본 총리 “박근혜 대통령과 대화하고 싶다”(8/26,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원한다는 뜻을 직접 밝혔음. 쿠웨이트를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26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음.
- 그는 이날 동행한 기자단에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과 관련해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이같이 밝혔음.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원한다는 것도 함께 언급했음.
- 일본은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의했으나 ‘실질적인 회담이 열릴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한국의 판단에 따라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 ● 일본, 후쿠시마 원전자료 일부 한국에 제공(8/28, 연합뉴스)

- 일본 정부 관계자는 28일 주일본 한국대사관 측과 오찬을 겸한 자리에서 한국이 요청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자료 일부를 우리 측에 제공했음.
- 한국 정부가 요구한 자료는 오염 현황, 일본 정부의 대책, 원전 상태 등에 관한 것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나중에 전달될 예정. 일본은 적절한 시기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와 외무성 관계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



고 한국의 질의에 답변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앞서 한국 외교부는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우려가 커지자 관련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일본에 요구했음.

● **반기문 사무총장 발언 진의 확인에 나선 아베 정권(8/28, 아사히신문)**

-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인식에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아베 신조 정권이 당혹해하고 있는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불쾌감을 표시했으나 이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보았음.
- 일본 정부 내에서는 중립이어야 할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으로는 일방적이라는 등 의문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 한일관계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발언을 계기로 냉각된 일·한 관계를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강함.
- 한편, 한 외무성 간부는 “반 총장의 발언과 일·한 관계는 별개의 문제다. 우리는 정상 회담을 위한 협의를 묵묵히 추진할 뿐이다”고 말했음.

● **정부, 日에 ‘위안부 협의촉구’ 구술서 전달 검토(8/29, 연합뉴스)**

-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촉구하는 3차 구술서(외교문서)를 일본 정부에 다시 전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이번에도 구술서에는 1·2차 때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멸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동(同) 협정 제3조에 따라 외교당국 간 협의를 개최하길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임.
- 한편, 일본은 우리 측의 구술서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며 사실상 협의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정부는 일본이 계속 제안을 거부하면 수위를 높여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일본에 제안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고 있음.

라. 미·중 관계

● **미중 해군, 아덴만서 합동군사 훈련(8/25, 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 해군이 아덴만에서 해적 퇴치를 위한 합동 군사훈련을 했다고 중국 해방군보가 25일 전했다. 중국의 호위함 하얼빈호와 웨이산후호, 미국의 미사일 구축함 메이슨호가 합동훈련에 참가했으며 양측 해군은 서로 상대방의 경무기를 발사하는 교환 사격 훈련도 했음.
- 이번 훈련을 통해 미중 양국 해군은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로 손발을 맞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쌓은 것으로 평가됨.



- 중국, 미국에 “홍콩 정치 문제 개입말라” 경고(8/29, 연합뉴스)
  - 29일 홍콩 언론에 따르면 쑹저 중국 외교부 홍콩주재 특파원은 지난 27일 클리포드 하트 미국 총영사를 만난 자리에서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홍콩의 정치 체제 발전은 내부 문제로 외국 정부와 관리들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음.
  - 쑹 특파원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30일 부임한 하트 총영사가 홍콩의 행정장관 직선제 문제에 대해 ‘진정한 민주적 보통선거’를 향한 홍콩인들의 행동을 기대한다고 말한 데 따른 것임.
  - 홍콩은 2017년 행정장관 직선제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중국 당국은 ‘반중(反中)’ 인사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며 사전에 후보를 걸러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 미국 국방장관 필리핀 방문…미군 순환배치 확대 논의(8/30, 연합뉴스)
  -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이 최근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마닐라를 방문, 알베르토 델 로사리오 외무장관 등 필리핀 각료들과 만나 미군 병력과 함정, 전투기 등의 순환배치 확대 방안을 협의키로 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 헤이글 장관의 이번 방문은 특히 미군 순환배치 확대를 위한 양국 간 실무협상이 이날 워싱턴에서 재개되는 것과 때맞춰 이뤄진 것이어서 한층 무게가 실린 것으로 분석됐음.
  - 미국과 필리핀의 국방공조가 한층 구체화되면서 중국의 반발도 덩달아 거세지고 있음. 중국 정부는 전날 필리핀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내달 초로 예정된 아키노 대통령의 자국 방문을 거절했음.

#### 마. 미·일 관계

- “미·일, ‘일본의 적기지 공격력’ 협의 개시에 합의”(8/28, 연합뉴스)
  -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28일 제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개최중인 브루나이에서 회담을 갖고, 미국과 일본이 일본의 적기지 공격력 보유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음.
  - 일본은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순항미사일 같은 선제 공격용 무기는 보유하지 않고 있음. 오노데라 방위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삼는 적기지 공격력 보유와 관련, “미국의 ‘확장억제’를 보완하는 능력을 검토하고 싶다”고 부연했음.
  - 이에 따라 양국이 미일 외무·국방장관 회담(2+2)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논의를 통해 일본의 적기지



공격력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이 적기지 공격용 무기 보유를 추진할 경우 전수방위의 틀을 흔들게 된다는 점에서 미일 간 논의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 바. 미·러 관계

##### ● “러 G20서 푸틴-오바마 개별 회동할지 불투명”(8/30, 연합뉴스)

-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외교 수석)은 30일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별도 정상회담은 계획돼 있지 않다”며 다음 달 초 주요20개국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양자 접촉을 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 그는 “그러나 두 정상은 정상회의 과정에서 얘기를 나눌 기회는 많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서서 하는 대화가 될지 아니면 아서 하는 대화가 될지 등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음.

#### 사. 중·일 관계

##### ● 일본 후지산 기슭서 센카쿠 사태 상징 실탄사격 훈련(8/25, 연합뉴스)

- 일본 육상자위대의 최대 규모 실탄사격 훈련인 ‘후지 종합화력연습’이 25일 시즈오카현의 후지산 기슭에서 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2만8천여 관중 앞에 최신예 전차와 박격포가 나선 이날 훈련은 중국과의 갈등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와 같은 낙도에 상륙한 적을 격퇴하는 상황을 상징했음.
- 한편,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시찰한 이 행사를 위해 약 3억5천만 엔(약 39억 원) 어치에 해당하는 실탄 약 44t이 준비됐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 ● 中항공기, 센카쿠 근접...항공자위대 출동(종합)(8/27, 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는 중국 국가해양국의 Y12 프로펠러기 1대가 26일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 인근 자국 영공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Y12기의 근접 비행에 대응해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출동시켰음. Y12기는 동중국해를 남동쪽에서 비행하다 센카쿠 북쪽 약 100km 지점에서 방향을 바꾸어 중국 쪽으로 북상했으며, 영공 침범은 발생하지 않았음.
- 최근 일본이 센카쿠 방위력 강화를 위해 예비 해병대 신설, 미군 수송기 오스프리 도입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이 의도적인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





- **中 “말로만 대화하지는 일본…정상회담 가능하겠나”(8/27, 연합뉴스)**
  - 신화망에 따르면 리바오동 외교부 부부장은 27일 G20 정상회의에 맞춰 중일 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센카쿠(중국어명: 댜오위다오) 문제를 거론하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본이 원하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음.
  - 리 부부장은 이어 중국은 시종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중일관계를 개선하자고 주장해왔지만, 일본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는 거부하면서 말로만 대화를 외치고 허세를 부렸다고 이는 남의 이목을 현혹하려는 것이라고 성토했음.
  - 리 부부장은 또 일본이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말재주를 부릴 것이 아니라 역사를 직시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먼저 양국 관계의 장애물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중국 함대 오키나와 부근 해역 통과(8/28, 연합뉴스)**
  - 중국 해군 호위함들이 27일 일본 오키나와와 미야코지마 사이 해역을 통과했다고 중국신문망이 일본 교도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음.
  - 앞서 중국 함대는 지난달 25일에도 이 해역을 통과한 바 있음. 일본 열도의 중간에 있는 이 해역은 공해라서 중국 함대의 통과가 국제법상 문제는 없지만 중일간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중국어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이라는 점에서 일본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음.
  - 이와 관련, 중국 국방부는 이들 군함이 서태평양에서 진행 중인 편대 정찰, 지역 방어 종합 공방 등 해상 훈련에 참가한다고 밝혔음.

#### 아. 기타

- **미·필리핀, 남중국해 주변 군사공조 합의(8/25, 연합뉴스)**
  - 미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의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기 위해 군사공조를 강화기로 했다고 필리핀 방송이 25일 보도했음. 이는 최근 필리핀이 중국의 영유권 공세에 대응, 군사기지를 미군에 확대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진 합의여서 주목됨.
  - 양국은 그러나 최근 남중국해에서 공세적 행보를 강화하는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음.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일대에 해군 전초기지를 구축한 데 이어 해상순찰 루트를 개설하는 등 분쟁도서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있음.
  
- **“일본 아베정권, 집단적자위권 행사 절차법 추진”(종합)(8/26, 연합뉴스)**
  -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구상대로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때에 대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절차를 담은 ‘집단적자위사태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 때 법안을 제출한다는 목표임.
  - 법안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국회의



의결이 있을 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중단하는 내용 등을 담게 될 것으로 보임. 긴급한 상황에서 국회 승인 없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 뒤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지가 논점이 될 전망이다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 **아베 중동순방은 ‘집단적 자위권 외교’(8/26, 연합뉴스)**

- 지난 24일 시작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중동 순방은 외견상 에너지·경제 협력에 방점이 찍힌 듯 하지만 본인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분위기 조성과는 무관치 않아 보임.
- 호즈무르 해협 등 중동산 원유 수송로의 안전성 확보에 일본도 비중있는 역할을 담당하기 원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이번 중동 순방에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됨.
- 아베 총리는 24일 칼리파 바레인 총리와의 회담에서 아라비아 반도 6개국으로 구성된 걸프협력이사회(GCC)와의 각료급 전략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음. ‘해적퇴치는 경찰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다국적 부대로의 병력 파견에 따르는 집단적 자위권 논란을 돌파하면서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존재감을 높이려는 행보로 보임.

● **오바마, 10월 동남아로…APEC·EAS 정상회의 참석(8/26,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라 10월 동남아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7~8일·인도네시아 발리)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9~10일)에 참석함.
- EAS, 다시 말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는 이들 국가 외에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등도 참여하고 있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지역 현안은 물론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이뤄지는 중요한 정상들의 포럼임.

● **매케인 美상원의원 “한일, 대화 시작해야”(8/26, 연합뉴스)**

- 존 매케인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26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힘을 합쳐 여러 가지 양국간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을 방문 중인 매케인 의원은 이날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으로 불미스러운 관계였지만 21세기 아시아의 현실이나 정세는 60년 전과는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북한에는 젊은 지도자가 무모한 행동을 하면서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이 자기 입장을 두드러지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여러 영토분쟁이 있고 이것이 바로 (한일) 양국을 하나로 묶는 공통의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